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목)

CONTENTS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IB 2019-09)

CONTENTS

- I.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1
- II.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9
- III.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 22

발 행 인: 김세연

편 집 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원표, 김창배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19년 10월 31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0월 5째주)에는 공수처 문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 장기 디플레이션 우려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文정부의 공수처 설치 강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2편에선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 원잠 획득방법, 그에 필요한 선결과제 등을 마련했으며, 제3편에서는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제1편: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조태진 변호사)

‘조국 사태’ 이후 文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안보·외교 등 분야에 걸친 실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공수처 법안 통과 =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정 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과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제2편: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닌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 때문에 미북 회담이 표류하고 있음.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美 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SLBM과 그 투발 플랫폼인 전략잠수함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음. 전략잠수함과 SLBM은 美·日에게도 위협이지만, 사실 이의 전력화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임. 기존 한국의 무기체계로는 北 SLBM에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한 한국 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국은 핵잠수함의 △해외구매, △임대, △자체개발 등 3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며, 同 옵션 관련 경제적·기술적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따라서 한국은 역내 ‘게임 체인저’인 北 SLBM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착수해야 함

제3편: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최근 경제위기상황 진단 및 시사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장기 경기부진과 더불어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이른바 준(準)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장기복합불황(일본형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임.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오기를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실기형 장기불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규제일변도 경제를 ‘민부론(民富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1.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작성: 조태진 변호사 /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judgetj@hanmail.net)

'조국 사태' 이후 文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안보·외교 등 전분야에 걸친 실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공수처 법안 통과 =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과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1. 현황과 문제점

□ 공수처 법안¹⁾의 의의와 개요

-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공수처 법안의 취지임
- 文정부는 이 같은 제도적 취지만을 내세워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을 반(反)개혁세력으로 매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공수처 법안을 살펴보면 실상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는 '어용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혁(改惡)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1)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에는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바른미래당)이 있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함.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文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준으로 기술하기로 함.

- 지난 8월 19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주최로 “청년변호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말하다”라는 세미나가 열린 것을 비롯, 지금도 법조계, 학계에서는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음
- 공수처 법안은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여기에서는 ‘文정부가 의도한 대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공수처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정권의 구미에 맞는 ‘민변’ 출신 공수처장 임명
 -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5의 찬성으로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됨(제5조)
 - 문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인데, 당해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위원이 됨(제6조)
 -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물론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도 공수처 법안에 중립 혹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수처장은 정부와 여당의 구미에 맞는 법조인, 특히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인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조국 수사업무는 공수처로 이관됨
 - 文정부가 공수처 설치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조국 관련 수사업무를 공수처로 이관하기 위함으로 보임

-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검찰에서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방법도 없이 반드시 응하여야만 함 (제24조)

○ 공수처는 조국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즉,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검찰 권력 독점이 문제 된다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文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됨
- 文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반면, 공수처는 절대적으로 정의롭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조국 사건에 대하여 대거 불기소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조국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제29조), 실무적으로 재정신청은 대부분 ‘기각’되므로 결국 조국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확정될 것임

-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라지고, 정권 게이트는 난무하게 될 것임
 - 이렇듯 조국 사태에 면죄부를 준 공수처는 ‘국가기관 장악’을 다음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음
 - 공수처 법안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으로부터 일선 판·검사까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대부분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제2조), 이는 중립적인 수사·재판을 한 공무원까지 공수처를 통해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임
 - 실제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국 관련 수사를 수행한 검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조국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음(제2조)
 -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결국 공직사회는 ‘학습효과’로 정부와 여당에 ‘줄서기’를 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더이상 공직사회의 공정성, 정치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 게이트가 난무해도 수사는 할 수 없고, 수사를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므로 현 정부와 여당의 장기 집권도 가능해질 것임
- ‘공수처’ 출신 전관의 출현
 - 검찰을 대신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된 공수처 출신 변호사들은 퇴직 후에도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물론 공수처 법안에는 공수처에 몸담았던 자들이 퇴직 후 한시적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지만(제16조) 변호사 업무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이 변호사업계에 뛰어들 경우 각종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수임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하는 또 다른 ‘전관예우’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음

2.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

□ 검찰 권력은 공수처도 경찰도 아닌 ‘국민’의 것

○ 검찰개혁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인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공감하는 바임
- 다만,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가 아닌 ‘개혁의 방향’임
-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인권 보호’여야 하기 때문에 응당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 중립성의 확보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의 ‘의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면 우선 지난 2014년에 도입되었으나 文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함

- 특별감찰관 제도는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非違行爲)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효용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음
-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文정부와 여당이 세계적으로 유례도 찾기 힘든 공수처부터 만들자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있음
-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기소대배심제’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도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의미의 ‘기소대배심제’라 보기는 어려움
- 미국 각 주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정한 방식에 의해 선정된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대배심원’은 일반배심원들과 달리 시민제보에 의해 접수된 사건, 공무원 비리 사건, 정부산하 기관단체의 정기적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소환장 발부권한(증인소환장, 증거제출명령장)과 기소면책을 통한 증언취득(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부죄금지특권을 통한 증언거부시 기소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강제함)이라는 2가지 핵심 권한을 가짐
-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대배심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에 참여한다면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법비리 및 일반 국민들의 검찰,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 국민들이 검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막말 폭언 및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조사 방식임
- 이에 文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수사과정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 현재 미국의 경우 조서 작성자의 주관과 피조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조서 작성 방식이 아닌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낮음
- 그러나 영상녹화 방식의 조사는 영상기록으로 조사과정이 모두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자의 막말 폭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조사자가 조서에 악의적으로 기술했을 때 피조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사 ‘갑질’도 막을 수 있음
- 대신 조사자 입장에서 영상녹화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만큼 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수사보고 방식으로 간단히 요지만 기술하도록 하면 업무 부담도 줄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 제안

-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정국’으로 갈 것은 자명해 보이나, 국민들 대부분은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민들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 바로 인식할 때 국민들의 힘을 빌려 공수처 법안 통과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임
- 文정부와 여당이 일부 야당과의 야합을 통해 검찰개혁(改惡)을 획책하고 있는 데 맞서 법원, 검찰,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해야 함
-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튜브, 카툰, 애니메이션 등 젊은 층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재미있게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
- 참고로 변호사들은 설령 자신이 민변 등 좌파 변호사 임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에도 사석에서 공수처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진행한 사법개혁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변호사 1300여 명 중 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변호사는 150여 명에 불과했음

3. 결론 및 시사점

-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법’인 ‘공수처 법안’은 당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함
- 다만, ‘공수처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예시한 특별감찰관 제도 및 영상녹화 방식의 수사 활성화, 기소대배심제도 도입과 같이 ‘검찰의 권력을 경찰도, 공수처도 아닌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획기적이고도 선진적인 검찰개혁안을 보다 흥미로운 방식과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II.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작성: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kdn0101@hanmail.net)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닌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 때문에 미북 회담이 표류하고 있음.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美 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SLBM과 그 투발 플랫폼인 전략잠수함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음. 전략잠수함과 SLBM은 美·日에게도 위협이지만, 사실 이의 전력화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임. 기존 한국의 무기체계로는 北 SLBM에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한 한국 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국은 핵잠수함의 △해외구매, △임대, △자체개발 등 3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며, 同 옵션 관련 경제적·기술적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따라서 한국은 역내 ‘게임 체인저’인 北 SLBM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착수해야 함

1. 완성 앞둔 北 ‘게임 체인저’: SLBM과 전략잠수함

- 북한은 지난 7.23(火) 노동신문을 통해 건조 막바지에 있는 전략잠수함(SSB) 측면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
 - 同 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을 확대·개조한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북극성 3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기존 잠수함 선체를 개조했다는 점에서 전반적 항해·잠항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최초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 평가

○ 同 잠수함의 특징과 잠항도 및 성능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이 20여척 보유 중인 로미오급의 중국 개량형인 무한(武漢)급의 선체 확대 개조형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북한은 무한급의 선체를 연장하고 세일(Sail)을 확장해 SLBM 발사 장치를 설치
- 잠수함 선체는 작전심도의 수압을 고려해 선체 외벽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압력선체로 설계되는데, 이미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된 압력선체를 뜯어내고 별도의 미사일 발사 공간을 추가로 설치한 北 전략잠수함은 선체 상단과 미사일 발사관 주변의 내압(耐壓) 능력이 감소해 기존 무한급 잠수함의 잠항 심도보다 떨어지는 잠항도와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同 잠수함이 활동할 동해 수중 환경은 △뚜렷하게 발달한 온도층, △다양한 해류의 순환에 따른 수괴(水塊)의 발달 등 때문에 무한급의 잠항심도(250m)보다 얇은 심도로 잠항하더라도 한국해군 보유 소나 체계로 탐지가 어려움
- 무한급 잠수함의 배터리 성능은 최신 잠수함에 비해선 떨어지지만, 동해는 해류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北에서 南으로 해류가 흐르는 겨울철의 경우 선체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 사용만으로 해류를 타고 남하해 경북 해안 일대까지 진출이 용이
 - 이에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의 사각지대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음

○ 북한은 10.2(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정점고도 910km, 비행거리 450km로 관측

- 同 미사일은 2017. 8. 23(水) 조선중앙통신 보도 중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도면으로 첫 공개됐으나, 기존 도면에서 나타난 형상과 시험 발사에서 공개된 실물의 형상 등이 크게 상이해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
 - 2017년 보도에 나온 도면 속 북극성 3형은 기존 북극성 1형과 마찬가지로 뾰족한 탄두부 형상이었으나, 2019.10.2. 시험 발사를 통해 공개된 북극성 3형의 실물 탄두부는 둥근 형상
 - 둥근 형상의 탄두부는 항력의 증가로 인해 사거리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탄두부 내부 용적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다탄두에 유리
 - 북한이 사거리 감소에도 둥근 형상의 탄두부 설계를 취했다는 것은 Δ 항력 증가로 인한 사거리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고성능 추진체 개발에 성공했거나, Δ 同 미사일은 애초 긴 사거리 구현이 필요없는 對南 타격용으로 개발돼 사거리보다는 탄두 숫자 증가에 중점을 둔 개발 의도 등 두 가지 배경을 고려할 수 있음

- 同 미사일은 해류를 타고 南 중부권 이남 해안으로 이동한 전략잠수함에서 기습적 발사가 가능한 바, 중부권 모처 2개소에서 운용 중인 한국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경북 성주에서 가동 중인 미군의 AN/TPY-2 레이더의 탐지각 한계로 인해 조기경보가 불가능

- 한미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THAAD는 수직 발사 방식이 아닌 북쪽을 보고 전개된 지향성 발사관을 사용하며, 이들의 사격통제레이더 역시 360° 전 방향 상시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가 아닌 한 방향만 지향하는 바, 조기경보레이더 탐지각 밖에서 발사된 SLBM은 현 한국군의 요격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
 - 탐지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 도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추가 도입된 그린파인 레이더로 SLBM의 발사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패트리엇로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은 쏘 국토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북극성 3형이 다탄두일 경우, 동시에 낙하하는 다중 탄도탄 표적에 대한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패트리엇 시스템으로는 완전한 방어 자체가 불가능

2.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

-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전략잠수함·SLBM의 등장으로 기존 3축 체계는 완전히 무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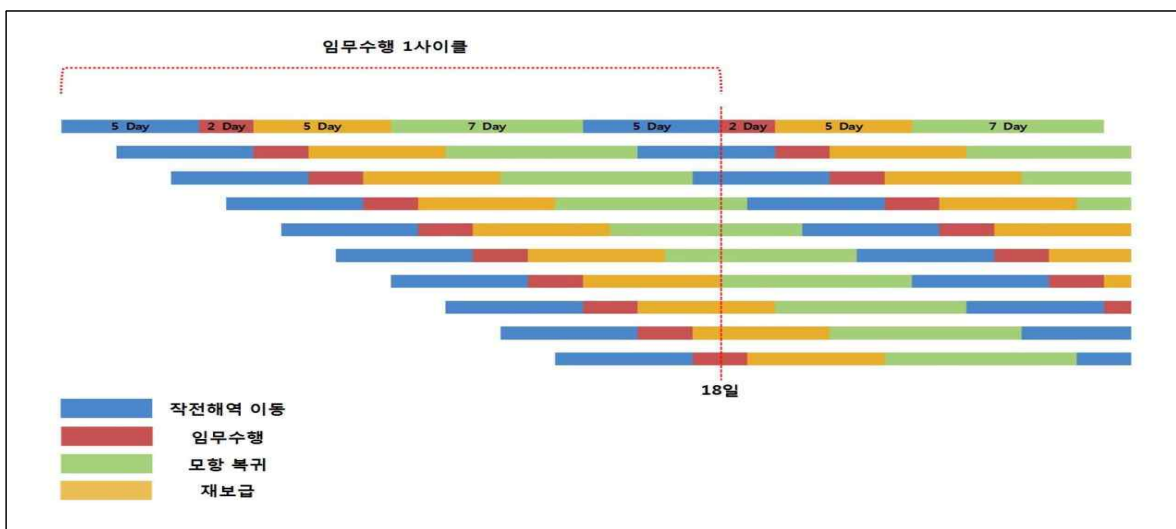
〈표 II-1〉 기존 3축 체제 제한사항

구 분	제한사항
전략목표타격 (舊 Kill-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타격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이 기립 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시간에 선제타격으로 제압하는 것이 골자 • 전략목표타격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北 미사일 운용시설 좌표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사전에 완성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미사일 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 운용이 필요 •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의 출항 여부 외 발사 준비 정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선제타격이 불가능
한국형미사일방어 (舊 KA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국형미사일방어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구축되고 있어 지상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요격도 제한되며, 방어 가능 면적이 쏘 국토의 10%에도 미치지 못함 • 북한이 그린파인·AN/TPY-2 레이더 사각지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기경보가 불가능 • 모든 요격자산의 사격통제레이더가 북쪽을 지향하고 있어 측면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교전 자체가 불가
압도적 대응 (舊 KM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PR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Second strike’ 개념이나, 애초에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와 대칭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북한이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해 南 정부와 군 지도부를 조기에 제압할 경우 응징보복을 결심할 의사결정권자 부재로 KMPR 구현 자체가 불가 • 역사적으로 볼 때 핵무기를 가진 대상에게 재래식 무기로 억제력 균형을 달성한 사례는 없음

* 자체 제작

- <표 II-1>에서와 같이 억제전략인 ‘압도적 대응’과 예방적 선제타격 전략인 ‘전략목표 타격’은 기술적·물리적 한계 때문에, 北 SLBM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
- 이에 한국은 北 전략잠수함에 대한 ‘수중 킬-체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
 - 육상에서의 킬-체인이 ‘탐지 → 확인/결심 → 발사명령 하달 → 발사 준비 → 발사/비행 → 탄착’ 등 6단계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 수중 킬-체인은 ‘감시/추적 → 발사 징후 포착 → 확인/결심 → 공격 명령하달 → 공격 → 격침’ 등의 6단계로 진행
- 육상 킬-체인이 北 미사일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정찰이 가능한 정보 자산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처럼 수중 킬-체인 역시 北 SLBM 발사 플랫폼인 전략잠수함에 대한 상시 감시정찰과 수중 타격이 가능한 타격자산의 보유가 기본 전제인데,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이러한 기능 수행이 대단히 제한

[그림 II-1] 재래식 잠수함(손원일급)의 수중 킬-체인 임무수행 사이클



- 재래식 잠수함의 연료전지와 축전지 방전 속도는 속도에 비례하므로 일반적인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최대 잠항일수 00일은 실제 작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한국해군이 보유한 1,800톤급 잠수함인 손원일급을 수중 킬-체인 임무에 투입할 경우 [그림 II-1]에 나타나는 것처럼 진해에서 마양도로 이동하는데 5일, 임무수행 2일, 모항 복귀 5일, 재보급 7일 등 19일의 임무수행 사이클이 발생
 - 이 기준으로 라면, 北 전략잠수함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용 잠수함이 10척 필요
 - 한국해군은 9척의 손원일급 잠수함을 보유하므로 여기에 1척의 잠수함을 더 추가해야 하며, 정비와 3직제(작전·교육훈련·휴식)를 고려할 경우 3배수의 함정이 필요하므로, 재래식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킬-체인 구현을 위해서는 30척의 잠수함이 필요
- 재래식 잠수함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더라도 작전해역 체류 가능 시간이 2일에 불과하며, 작전해역인 북한 영해에서의 스노클링과 배터리 충전은 불가능
 - 이에 감시/정찰 임무 수행 중 北 전략잠수함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거나 敵 공격 상황 노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부족해 敵 잠수함 추적, 회피기동 등이 제한
- 재래식 잠수함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스노클링 없이 장기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법 뿐이며, 이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전략 잠수함 대응 소요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임

- 현재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에 따른 논란으로, 일각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투입하는 방안을 주장
 - 그러나 미 해군도 버지니아급 잠수함 전력화 지연 문제로 가용 잠수함 전력이 충분치 않으며, 특히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했던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북한 잠수함을 추적했던 미국이 해당 정보를 한국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례(로버트 김 사건, 1996) 등도 있음
 -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에게는 독자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해야 할 충분한 동기와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3. 원잠 획득 방안: 해외구매·임대·자체개발

-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방안은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기술 도입 건조 방안, △해외에서 운용 중인 잠수함 임대하는 방안 △자체 개발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려 가능

〈표 II-2〉 해외 구매·임대 고려 대상 잠수함 후보군

국가	함종	주요제원	획득비용	비고
미국	Virginia class	· 수중배수량 : 7,925t · 최대속력 : 34kt · 동력 : S9G PWR(150MW) · 연료 : 93.5% HEU · 무장(Block I ~ IV) - 어뢰 및 미사일 37기 - Tomahawk VLS 12기	약 27억 달러 (FY2016)	구매 형태 추진 가능 연료 농축도 문제로 성사 가능성 낮음
	Los Angeles class	· 수중배수량 : 7,124t · 최대속력 : 33kt · 동력 : S6G PWR(165MW) · 연료 : 97.3% HEU · 무장 - 어뢰 및 미사일 37기 - Tomahawk VLS 12기	약 15억 달러 ('16 불변가)	구매/임대 형태로 추진 가능 연료 농축도 문제로 성사 가능성 낮음

국가	함종	주요제원	획득비용	비 고
영국	Astute class	· 수중배수량 : 7,519t · 최대속력 : 29kt · 동력 : PWR2(145MW) · 연료 : 93.5% HEU · 무장 - 어뢰 및 미사일 38기	약 19억 달러 (‘15 추정가)	구매 형태 추진 가능 연료 농축도 문제로 성사 가능성 낮음
프랑스	Barracuda class	· 수중배수량 : 5,200t · 최대속력 : 25kt · 동력 : K15 PWR(150MW) · 연료 : 7.5% LEU · 무장 - 어뢰 및 미사일 20기	약 16억 달러 (‘15 추정가)	구매 형태 추진 가능 해외 수출사례 有 성사 가능성 높음
	Amethyste class	· 수중배수량 : 2,713t · 최대속력 : 25kt · 동력 : CAW48 PWR(48MW) · 연료 : 7.5% LEU · 무장 - 어뢰 및 미사일 14기	약 6.7억 달러 (‘90 불변가)	구매/임대 형태로 추진 가능 도태 대상 장비로 성사 가능성 낮음
러시아	Project 885 Yasen class	· 수중배수량 : 11,800t · 최대속력 : 28kt · 동력 : GT3A PWR 2기 (48MW) · 연료 : 45% HEU · 무장 - SLCM VLS 8기 - 어뢰 및 미사일 30기	10억 달러 (추정가)	구매/임대 형태로 추진 가능 연료 농축도 문제, 적성국 장비로 성사 가능성 낮음
	Project 971 Shchuka-B class	· 수중배수량 : 6,401t · 최대속력 : 30kt · 동력 : VM4P PWR 2기 (48MW) · 연료 : 21% HEU · 무장 - 어뢰 및 미사일 40기	9억 달러 (리스비용)	구매/임대 형태로 추진 가능 연료 농축도 문제, 적성국 장비로 성사 가능성 낮음

* 자체 제작

○ 해외 직접 구매 또는 임대 형식은 가장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으나, 획득 가능한 후보군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외에는 대안이 없음

-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기술을 도입하여 브라질 국내에서 건조하는 SN-BR 프로그램의 경우 6,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6척 획득을 위한 총사업 비용이 95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음

- 이는 원전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브라질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프랑스제 잠수함을 기술도입하여 생산할 경우 브라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연료 농축도는 7.5~19.5%로 IAEA에서 규제하는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기술도입 건조와 핵연료 도입/유지보수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北 전략잠수함 전력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긴박성을 감안할 때, 초도함부터 3번함까지는 기술도입 건조를 통해 개발 리스크와 시간을 줄이고, 후속함부터 독자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4. 한국형 원잠 개발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 한국은 1990년대부터 1,200톤급 잠수함 9척, 1,800톤급 9척을 성공적으로 라이선스를 생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 모델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한 경력이 있는 잠수함 건조 기술 보유국
-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선체, △원자로, △추진체계, △전투체계, △소나체계, △무장체계 등에 대한 독자 설계·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017~2018년 수행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연구』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대우조선해양, 한국전기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기술성숙도 평가에서 대부분의 기술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성숙되어 있음을 확인

〈표 11-3〉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 성숙도 평가

구 분	평가	평가근거
선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질 고장력강(HY-100급) 자체 생산 기반 보유 대형 압력선체 설계 및 건조 기술·건조 인프라 보유
원자로	보완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용 원자로 설계·제작 경험 보유(SMART-P) 선박 탑재 가능한 수준의 소형화·안전성 기술 보완 필요
추진체계	보완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 기술 상당 수준 既보유 / 기술 개발 용이한 인프라 구비 하이브리드 추진방식(ECHO) 체계 개발 필요 * ECHO : Electric Compact Hybrid Operation
전투체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III 적용 기존 기술 활용 또는 기존 기술 기반으로 한 개조 개발 가능
소나체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고-III 적용 기존 기술 활용 또는 기존 기술 기반으로 한 개조 개발 가능
무장체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무장체계(어뢰·미사일 등) 활용 가능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 핵심 관건인 원자로의 경우 선박용 원자로의 기본 구조인 일체형 원자로 설계·제작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 3차원 전산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3차원 전산제작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3차원 전산공학(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4차원 공정관리(DPM: Digital Process Management) 등 신기술 등장에 힘입어 원자로 설계·제작·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앞서 소개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의 서균렬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공법을 이용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설계·제작 소요 시간을 최대 36개월로 판단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선택이 불가피한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난제, 즉 △제한공간 접근제약, △최대 잠항심도 제한, △전투충격 내구성 감소, △차폐, △원자로 제어 난제, △연료교체 관련 사고 위험성 증가 등 6대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
- 同 보고서에서 제안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NOAH 2020 (Nuclear Operated Attack Hull 2020)’은 에너지 효율과 정숙성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인 ‘ECHO’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로 터빈을 가동해 전력을 생산한 뒤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 추진 모터를 가동하는 방식

5. 한국형 원잠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

-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국내외 법적·정치·외교적 문제이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형 원잠 사업은 정상 추진이 불가
 - 국내법적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헌법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한 군함의 개발과 건조, 시험평가, 운용 전반에 있어 정비된 관계법령이 미비하므로, 유관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
 - ※ △원자력법(제4장, 제6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원자력안전법(제3장, 제4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등의 제·개정이 필요
 - 국제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협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일부 개정, 국제원자력기구 INFCIRC/153 제14조와 관련한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

- 한미원자력협정 제1조 ‘카’항의 평화적 목적의 정의에서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의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군용 선박 동력원으로써 원자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함
- 국제원자력기구 INFCIRC/153 제14조는 핵물질의 비평화적 활동에의 사용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예외조항(Non-Application of The Safeguard to Nuclear Material To Be Used In Non-Peaceful Activities) 준수를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핵연료 농축도를 해당 조항의 예외 사항으로 분류되는 20% 미만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료는 합성 동력원 으로서만 사용되며 핵폭발장치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IAEA에 통보/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IAEA 승인 등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

- 이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함에 있어 이 잠수함이 북한의 SLBM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 또한, 이 잠수함의 존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

○ 국내외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내 여론 역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있어 중요한 선결 과제 중 하나임

- 1척 예상 획득 비용이 1.5~2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최소 3척의 잠수함을 확보했을 때 총사업비용은 4.5조원~6조원에 달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

-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 잠수함보다 핵연료 교체주기가 짧아 방사성 폐기물 배출량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환경 이슈도 반드시 복안을 갖고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적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잖은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원잠은 상기 기술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무기체계인 바,
 - 정부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Ⅲ.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 최근 경제위기 상황 진단 및 시사점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lee.jong.in@ydi.or.kr)

장기 경기부진과 더불어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이른바 준(準)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장기복합불황(일본형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임.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오기를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실기형 장기불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규제일변도 경제를 ‘민부론(民富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1. 현 경제 상황 진단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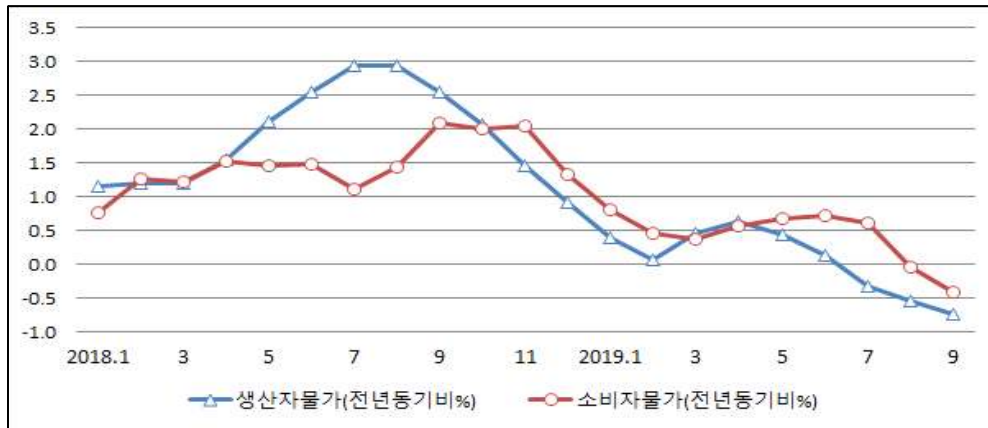
- 최근의 수출과 투자 급감에 따른 성장세 둔화에 더해, 2개월 연속의 마이너스 소비자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D) 공포’ 확산이 주된 배경
- 미·중 무역 갈등, 일본 경제보복, 중국성장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도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
- 한은 총재는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2년 내 0%대까지의 인하 가능성 전망

□ 경기침체와 低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형 디플레이션, 이른바 장기 복합불황 가능성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더해, 물가지수가 2018.9월 이래 0%대에 머무는 등 저물가 현상이 지속

- 低물가 지속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산가격 하락, 소비 위축, 생산고용 저하 등의 악순환이 이어져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적 복합불황이 초래될 수 있음

[그림 Ⅲ-1]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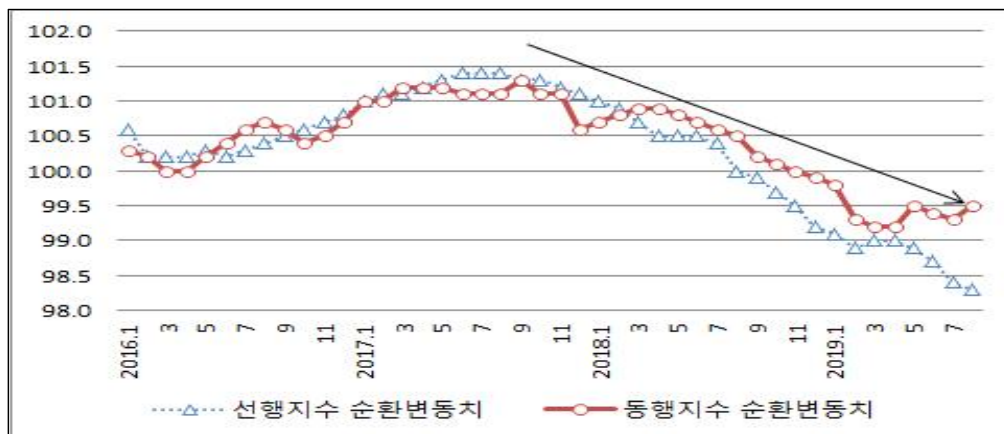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1] 대내 현황

○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3분기 이후 2년 넘게 경기침체 지속

-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추세적 하락 지속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25개월째 하강. 이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과거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

[그림 Ⅲ-2] 경기변동 추이



* 자료: 통계청

-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표 III-1〉 세계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세계(%)	3.6	3.4	3.4	3.8	3.6	3.0
한국(%)	3.3	2.8	2.9	3.1	2.7	2.2

* 주: 2019.10.15.일자 조정치임 (IMF가 조정한 한국 성장률은 2.0%임)

* 자료: 세계는 IMF, 한국은 한국은행

- 국내외 주요기관, 2019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일제히 하향 조정
 - IMF 2.6%(19.4:전망시점) → 2.0%(19.10), OECD 2.4%(19.5) → 2.1%(19.9), 한은 2.5%(19.4) → 2.2%(19.7), KDI 2.6%(18.10) → 2.4%(19.5)
- 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증가세 둔화,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비관적 소비자심리 등 총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
 - 설비투자·제조업 가동률의 대폭적 감소세가 2년 넘게 지속
 - 설비투자는 19.8% 증가율을 보였던 2017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2분기에 감소세(-4.3%)로 전환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하락하여 올해는 8월까지 72.5%에 불과
 - 반도체수출 급감 속에 수출증감률이 13개월째 감소세
 - 9월에도 11.7%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기록
 -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도 2018년 1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
- 고용은 악화되고 분배도 최악 상황을 갱신
 -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가 지속

-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급속 감소되는 반면, (초)단시간 알바, 저임금일자리, 노인일자리,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증가
- 소득분배는 최악 상황을 갱신 중
 - 2016년 4.51배 수준이었던 5분위 배율이 2017년 4.73배, 2018년 5.23배, 2019년 5.30배로 악화
 - 저소득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20%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이 2017.4분기 43%에서 2019.2분기 55%로 급증

② 대외 여건

○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 세계경제에 대한 부진한 지표 및 부정적 전망 확산
 - UN, 세계 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내년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경고²⁾
 -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2019년 전망치의 경우 3.9%(2018.4) → 3.7%(2018.10) → 3.3%(2019.4) → 3.2%(2019.7))
- 세계경제 침체 속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급락, 전반적 교역 조건 악화 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중간 무역 갈등 장기화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악화
 -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 독일 경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영국은 브렉시트 혼돈 상태
 - 중국 경제성장률 2018년 6.6%에서 2019년 6.2%로 하락³⁾

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과 개발보고서 2019'(2019.9.29.).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성장률을 2.3%로 예상하여, 지난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최저치로 전망했음. 또한 미·독·영 등 주요 선진국 중심의 경기침체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2020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6%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엔 달러 채권 무더기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됨.

2. 향후 전망-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

□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

○ 올해 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 달성조차 어려워진 여건

- 2019.3분기 실질GDP가 전기 대비 0.4% 성장을 기록(한은 속보치, 10.24)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 시장예상치인 0.5~0.6%를 하회하여 경기하강에 대한 불안감 고조
- 실질GDP성장률 2%를 하회한 경우는 극심한 경제위기 시기였던 1956년(0.7%),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등 4차례에 불과

○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향 재조정

- 한은은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2.5% → 2.2%로 하향 조정
- 주요기관들 역시 지속적 하향 재조정하고 있으며, 10.28 현재 대표적 해외투자은행 9곳의 전망치 평균은 2.1%에 불과⁴⁾

○ 잠재성장률도 10년 내 1%대로 추락 전망

- 1990년 초까지만 해도 7%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대로 빠르게 하락
- 향후 노동·자본투입의 기여도 하락 등으로 2025년까지 2% 초반, 그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⁵⁾

〈표 Ⅲ-2〉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연도	'06-'10	'11-'15	'16-'20(E)	'21-'25(E)	'26-'30(E)	'31-'35(E)
잠재성장률(%)	3.9	3.2	2.5	2.1	1.9	1.7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9)

- 4) 바클레이즈, BOA-메릴린치,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9개 해외 투자은행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올해 5월)→2.3%(7월)→2.2%(8월)→2.1%(9월) 등으로 지속해서 하향 재조정해 옴.
- 5)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은에서도 잠재성장률 0.3% 내외 하향한 재추정치를 발표

□ 저성장(R) 우려 속 저물가 지속으로 디플레이션(D) 가능성 제기

-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현상이 1년 넘게 지속
 - 2018년 연간 1.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9.1~9월 중 0.4%로 하락,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지속
 - 근원물가(core inflation)⁶⁾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9월 현재 전년동월비 0.6%를 기록
- 최근의 저물가 지속은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 수요 위축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
 - 2019.1분기 이후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모두 둔화세 지속
 -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악화도 수요위축의 주된 요인
- 정부(한은)에서는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판단하지만⁷⁾, 학계에서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황으로 진단
 -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뿐 아니라 전반적 물가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조차 마이너스를 기록
 - 2018.4분기 -0.1%, 2019년 1분기 -0.5%, 2019년 2분기 -0.7%

□ 일본의 장기복합불황과 닮은꼴?!

-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 이른바 장기복합불황 우려가 점차 확산

6)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에 포함되는 460여개 품목 중 계절적 영향을 받는 농산물 및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류 등 53개 품목을 제거하고 집계하여 산출.

7) 박상우, 김동찬, ‘주요국 물가 하락기의 특징’,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2019.9.30.)

- 자산가격 하락, 저소득·저신용가계 증가, 기업매출·수익성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부진 지속의 악순환 가능성 제기
 -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이 수반되지 않아 자산가격 폭락 등으로 촉발된 일본형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디플레이션 지속 상태
- ※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 The Lost Decade)은 1980년대 거품경제 소멸 이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경제 불황을 말하며, 그 여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기에 ‘잃어버린 20년’으로 부르기도 함

3. 평가 및 시사점

□ 저성장·저물가 지속 현상,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 초래 가능성

- 현 상황은 경기부진과 더불어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이른바 준(準)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2년 넘는 장기 경기하강국면과 더불어, 9개월 연속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부진→생산·투자 위축→저물가’의 악순환 상황임을 반증
- 소비·투자의 위축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불황 즉, 장기복합불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⁸⁾
 - 11월 1일 발표 예정인 10월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마이너스 가능성 높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경기 오판이 상황을 악화

-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 2년 반 동안 세계경제 수준을 하회해 왔으며,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어 옴

8) 이론상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0% 이하로 하락’하는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2년 이상 마이너스 물가(IMF)’의 경우 또는 단지 ‘경기와 물가가 장기간 동반 하락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외의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음
- 상황 오판, 무시하거나 일부만 보고 짜깁기하며, 그래도 안 되면 남 탓이나 희망고문으로 일관
- 연이은 고용참사 통계에도 청와대·대통령은 “고용의 양·질 모두 개선”(9.16수보회의), “선방하고 있다”(10.13 靑브리핑)며 상황 오판
 -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에도 “우리 경제 튼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9.16수보회의)며 아집
 - 자영업·무직 통계 제외한 “직장인 90% 소득증가”만 강조
 -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는다”(8.5 수보회의)는 희망고문의 전형
- 문재인 정부의 현상에 대한 오판과 아집으로 인해 더 큰 위기 초래
- 경기 판단 오류 등 잘못된 진단으로 재정·통화정책의 실기 빈발
 -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슈퍼예산이 복지에 치중함으로써 성장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함
-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문제해결의 지름길
-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인정하고, 디플레이션이 수반되는 장기불황의 조기 차단에 주력해야 함
- 지속되는 저물가 현상이 ‘소비·투자 부진 → 생산·고용 저하 → 물가 하락’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중장기 경제운영 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처할 필요
 - 복지확대에 치중된 재정정책의 방향을 ‘경기 진작’으로 전환하고, (한은이 시사한) 추가적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오기를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정책 실기형 장기불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적극적인 노동 투입과 자본투자 확대, 생산성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함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규제일변도 정책을 시장 중심의 자율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해야 함
 - 우리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비전, 제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